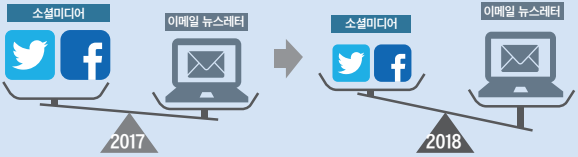


3》창간기념 설문조사



4, 5》기부금 1000억 목표, 넘어야 할 산 많아



6》시간강사 임금, 3년째 동결



행복기숙사 임시 사용승인 만료 임박 11일 학교-구청 협의 ... 대책은 '아직'

강석현 기자 nujabes99@khu.ac.kr
김수혁 기자 sherik@khu.ac.kr

【서울】행복기숙사 임시 사용기한이 오는 8월로 만료된다. 학교는 지난해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오는 8월까지 정문 앞 도로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현행 건축법 제22조 제3항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르면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행복기숙사가 작년 8월에 받은 1년간의 임시사용승인 조치는 오는 8월 23일을 기해 만료된다. 임시 사용승인이 연장되거나 정식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면 우리학교는 행복기숙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기숙사생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김지현(식품영양학 2018) 씨는 “당장 잘 곳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다”며 걱정을 내비쳤다. 이재혁(무역학 2017) 씨는 “학생들은 학교가 잘하겠거니 믿고 있는 것이다”라며 “학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행복기숙사 행정실 윤필영 계장은 사용승인이 반려될 경우에 대한 대책에 대해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윤 계장은 “건물에 큰 문제가 없으니 극단적인 상황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사용허가가 안 나면 행정처분 절차는 따라가겠지만 학생들의 주거문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 동대문구청 건축과 경한수 과장은 “아직 학교나 법인 측과 합의한 바가 없다”며 “구청이 원가를 특별히 언급할 만한 입

장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건축신청 당시에는 경희대로를 공공도로라고 했다가 이를 부정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건축인허가서와 상충하기 때문에 경희대로와 관련한 논의는 신청인인 학교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2016년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동대문구청이 사용하고 있는 경희대로 부지가 법인의 사유지라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경희대로 부지를 사유지로 인정하며 동대문구청은 도로부지에 대한 기간의 부당이득금 14억여 원과 매년 약 1억 4000만 원의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선고했다. 판결 이후 동대문구청은 이를 지불할 재정적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법인 심의기획실 조병렬 계장은 “동대문구청과 함께 도로사용료

를 지불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는 TF팀을 구성해서 상생방안을 마련하자고 이야기했으나 동대문구청 측에서 이를 거절했다”며 “동대문구청 측은 경희대로를 기부하든지 아니면 아예 부당이득금과 도로 사용료 전부를 받지 말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 계장은 “작년 논의와 다를 바 없어 현재까지도 구청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 학교와 구청은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우리학교 정서영 부총장, 총무관리처장과 동대문구 부구청장, 건설교통국장 등이 참석한 이날 협의에 대해 총무관리처장 정진봉 처장은 “원만하게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어가기로 했다”면서도 상황 개선 조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Newsmaker

제29대 총동문회 회장 당선
권오형(경영학 65) 동문



“후배를 위해 동문회가 바른 소리를 내야한다”

최명규 기자 gyumyeong@khu.ac.kr

“후배를 위해 동문회가 바른 소리를 내야한다.” 권오형(경영학 65) 동문이 우리 학교 총동문회 제29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권 회장은 삼덕회계법인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학교법인 경희학원 감사를 맡았다.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총동문회관에서 만난 권 회장은 ‘후배’라는 단어로 말문을 열었다. 중국 고전 문학 <서유기>를 이야기하며 권 회장은 “손오공이 요괴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할 때 마다 그는 주변 인물로부터 도움을 받아 이를 해쳐나갔다”며 “서유기가 품고 있는 교훈처럼 총동문회는 우리 후배들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늘 곁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야 한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후배의 사회진출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총동문회 주최 취업박람회 그 중심이 될 예정이다. 권 회장은 “모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후배들의 취업정보, 취업알선, 취업훈련 등을 정례화 할 것”이라며 “현장의 소리를 많은 들은 동문을 초청해 후배의 취업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동문회와 학교가 함께 재학생의 취업을 돕는 시너지를 만들어야한다”고 덧붙였다. 동문회와 모교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경희포럼’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권 회장은 사회를 개울에, 동문을 징검다리에 빚대며 현 동문 환경에 아쉬움을 표했다. “소위 스카이라 불리는 대학은 사회라는 개

울에 동문 징검다리가 촘촘하게 이어져 있다. 이들 대학 동문은 후배의 사회진출에 큰 디딤돌이 된다. 하지만 우리대학 상황은 다르다. 우수한 동문조차 교류가 활발하지 못하다고 느낀다. 사회라는 냉정한 개울에서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동문을 징검다리 삼아 후배들이 한 발 짝 앞으로 나아가는 힘든 측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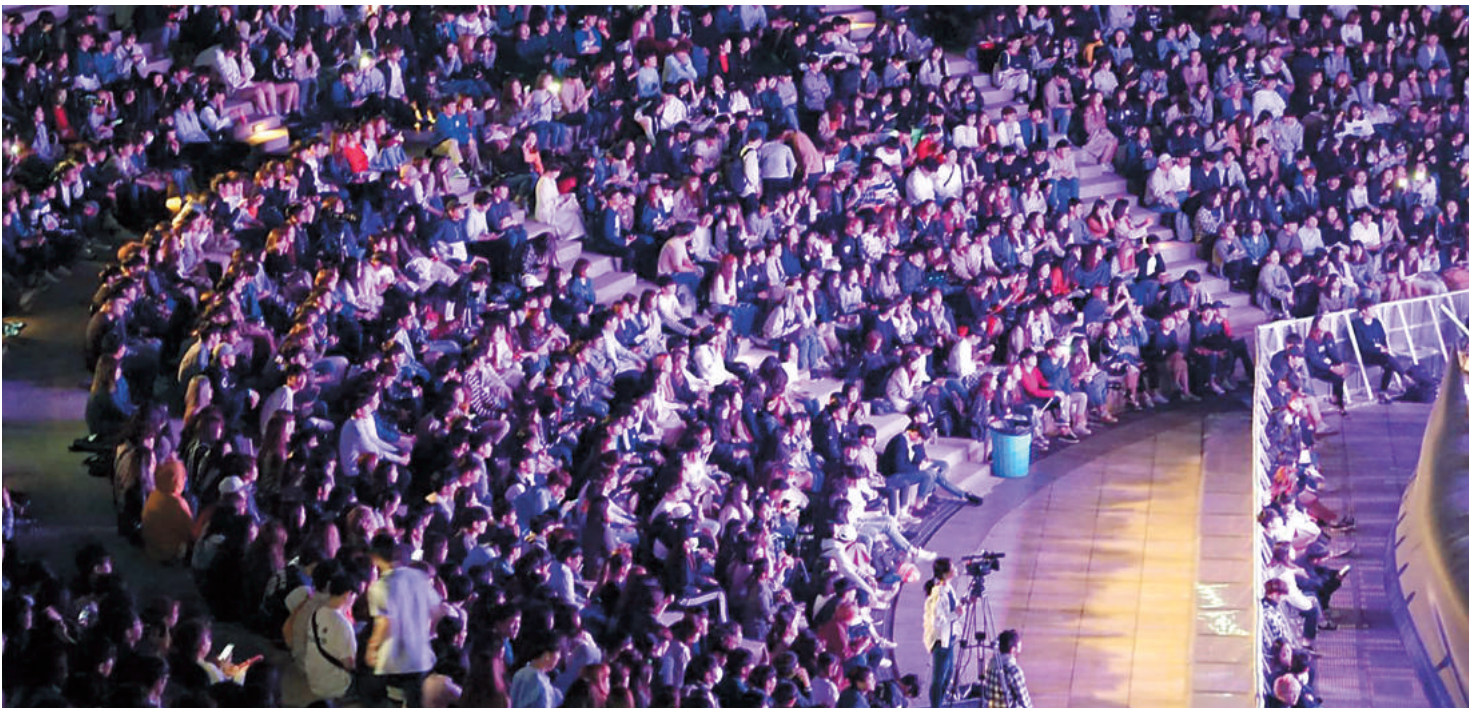
권 회장은 이를 방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권 회장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듯이 총동문회 회장으로서 구슬처럼 빛나는 우리 동문을 이룰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지속하기 위한 비전으로 스스로 자생 가능한 동문회를 제시하기도 했다. 재정적 안정성을 갖춘 동문회가 모교에 실질적인 이미지를 할 수 있는 모델이다.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연세대 동문회처럼 우리 총동문회도 수익사업을 구축해야 할 요청이 있다. 우수한 우리 동문이 동문회를 통해 재능을 기부할 수 있으려면 기부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수입사업 등을 통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동문회가 되도록 노력해야한다.”

그는 30만여 명 동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의 기틀을 마련해 개교 100주년을 향한 동문회관 재건펀드 기초도 다지겠다고 다짐했다.

권 회장의 마지막 말 또한 후배로 맺어졌다. “후배들이 동문회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동문회도 후배가 선배에게 부담 없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선후배가 이어졌으면 한다.”



【국제】축제 첫날인 지난 8일 학생회가 공연관람 특권을 누렸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학생들은 “안전관리를 펜스 안에서 하나”며 불만을 표했다. 이에 당시 가요제를 진행했던 5개 단과대학 학생회는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학생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며 특권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사진=김지원 기자)

총학, 축제 주류 판매금지 수용, 단대 학생회는 ‘울상’

권민경 기자 kmg2199@khu.ac.kr

서울캠퍼스(서울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은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를 통해 축제에서 주류 판매금지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주류 판매는 금지됐지만 외부에서 자신이 마실 주류를 사오는 것은 가능하다.

이번 안건이 의결된 것은 교육부를 통해 전달된 관세청 공문 때문이다. 지난 1일 교육부는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대학에서 주세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예방하라”고 전했다. 또한 ‘무면허로 주류를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면허 소매행위를 한 자는 9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후 서울캠은 지난 4일 학생지원센터, 총무과, 관리과 직원과 학생대표자가 모여 논의를 나눴다. 본부는 “위법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류를 매매하는 것을 방지

할 순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서울캠 비대위는 해당 안건에 대해 비상 중운위를 개최해 11일 중 10인의 찬성을 받아 주류를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제캠 총학도 지난 4일 긴급 중운위를 소집해 만장일치로 주류 판매 금지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제캠 총학은 “캠퍼스 내에서 합법적으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 우리학교 축제를 지역 축제로 전환하거나 임시 주류 판매 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어려웠다”며 “합법적으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축제는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노점에서의 주류 판매는 금지돼 있지만, 지역축제의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줘 예외적으로 주류 판매가 가능하다.

한편, 중운위에 참석한 각 단과대학 대표자는 이미 주류 공동구매를 진행해 손해를 면하는 것은 힘들다고 토로했다. 호텔관광대학 학생회 김영우(Hospitality 경영학 2016) 회장은 “단과대학 차원의 축제가 있는데 공문 때문에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라며 “금전적인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카카오톡 오픈 ID : 대학주보
- 에브리타임 : 대학주보 게시판
- 트위터 : @khunesws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전문가 칼럼

우리에게 필요한 통일은?

이창희(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7면



시선

사설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묵묵히 미래를 향해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가장 좋은 위치에 넓은 공간을 할애해 뉴스를 배치하고 있다. 몇 년 전, 메인페이지 뉴스리스트 편집과 어뷰징 등 논란으로 인해 뉴스스탠드 형식으로의 전환을 꾀했지만 최근 ‘드루킹 사태’ 등 여전히 포털사이트 뉴스에 대한 논란은 남아있다.

네이버는 뉴스로 성장했다. 인터넷의 초창기, 각종 포털사이트가 자사만의 독특한 서비스로 무장하고자 했을 때 네이버가 택한 것이 뉴스였다. 독자들은 이 언론, 저 언론 옮겨 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모든 뉴스를, ‘알קות’ 광고 없이 깨끗한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택했다. 언론은 온라인화에 투입할 여력을 네이버에 아웃소싱했다. 윈-윈으로 보였던 그림은 네이버의 일방적 승리로 끝났다. 네이버는 대한민국의 주필이 됐다.

기성언론의 지평이 이러한 가운데 대학주보는 창간 63주년을 맞았다. 여느 기성언론 못지않은 시간을 걸어왔고 누구 못지않은 족적을 남겼노라 자부한다. 대학주보가 가진 ‘최초’의 타이틀은 한둘이 아니다. 가로쓰기, 한글쓰기, 판형의 변화 등. 한때는 월간 발행의 매거진을 통해 종이 신문의 한계를 깨고 더 많은 이야기를 담아 보고자 하기도 했다.

온라인 시대는 가혹했다. 기성언론이 네이버에 종속되는 동안 대학주보는 어딘가에 종속될 수조차 없었다. 대학언론 중에선 가장 선제적으로 디지털화를 꾀했다. 적극적으로 SNS를 운영하고 뉴미디어 시대에 맞춘 포맷을 시도했으며 변화하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에게 넘쳐나는 읽을거리 중 하나일 뿐이었다.

이는 각종 수치가 대변한다. 단적으로 매년 진행하는 연례 구성원 미디어 이용 실태 설문조사가 그렇다. 올해 설문 참여율은 극히 저조했다. ‘대학주보’라는 이름이 구성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안에서 볼 수 없으니 밖의 눈을 빌어 그것을 살피고자 함이었으나 ‘대학주보’라는 이름이 붙은 이메일을 열고 대답해 준 구성원은 100명을 조금 넘기는 수준이었다. 이미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이었다. 올해 초 시사인 대학언론상을 받으며 고무됐던 분위기는 마주한 현실 앞에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이 어디인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했다.

스스로에게 냉정한 시선을 보내자면 익히 알고 있던 일이었다. 일부 화제가 된 기사가 아니라면 두 자릿수를 넘기 어려운 저조한 조회수, 이메일 뉴스레터의 저조한 개봉률 등 징후는 넘쳐났다. 본질적으로 아마추어인 대학기자들이 써낸 기사는 느렸고 정확하지 않은 때도 있었으며 세련되지 않은데다 학내 많은 목소리를 다 담아내는 것도 불가능했다.

그래도 우리는 글을 쓴다. 개교 69주년과 창간 63주년을 맞은 이 1634호 역시 평상시의 대학주보라고 생각했다. 관행처럼 받아오던 축하와 각종 특집도 최대한 배제했다. 읽을거리와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도 대학주보를 찾아주는 독자가 그래도 있음을 알기에, 좋은 기사를 쓰면 읽어주는 독자가 있음을 믿기에. 언론은 결국 생산해내는 뉴스로 말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본령을 다시금 확인하고 글로써 지반을 다져나갈 것임을 여기에 약속한다.

대학은 지금

학생들 확대된 참여 권한 요구해

안나연 기자 na@khu.ac.kr

이번 달 내내 이어질 대학가 축제에서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공문이 교육부를 통해 각 대학에 전달됐다.(‘**캠퍼스 내 주류 판매 금지**’ **기습 공문에 대학가 당황/한국대학신문, 2018.05.09**) 이에 우리학교를 포함해 건국대, 중앙대, 연세대 등이 축제 기간 내 부스에서 주류 판매를 하지 않을 것을 밝혔다. 해당 공문은 ‘주류 판매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판매를 감행할 경우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적인 제재로 이어지기에 다수의 대학은 해당 공문을 수용했다. 다만 축제를 길게는 2주, 짧게는 며칠 앞두고 발표한 것에 대해 시기상으로 적절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표했다. 고려대에서는 지난달 8일에 열린 전체학생대표자회

만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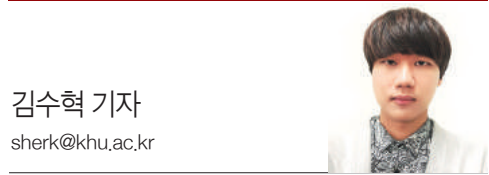
행복 기숙사, “우리 일은 아니라...”



이소진 기자

이 주의 주제 - 행복기숙사 사용승인

판돈으로 걸린 학생들의 주거안정



김수혁 기자
sherk@khu.ac.kr

행복기숙사가 어느덧 캠퍼스의 익숙한 부분이 됐다. 천 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에게 이곳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집이다. 그러나 이 건물은 법적으로 여전히 ‘임시’딱지를 떼지 못하고 있다. 오는 8월 23일이면 지난해 내려진 행복기숙사에 대한 1년간의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만료된다. 기숙사 사용승인 문제에는 기숙사생 보금자리의 법적 지위가 달려있다. 그러나 관계기관들은 합의는 고사하고 일 년 전의 협상 결렬 상태에서 한 걸음의 진전도 이루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황스러웠던 점은 이렇다 할 상황의 진전이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관계기관 모두가 상황을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이었다. “관할 업무가 아니다”, “현재로서는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 쪽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지만 저쪽에서 반응이 없다”같은 답변만 연이어 돌아왔다.

상황이 복잡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구청 입장에서 경희대교가 경희학원의 사유지로 판정났으니 공공도로 확보 문제는 경희학원과 그 산하 기관인 경희대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경희대로 분쟁은 법인과 동대문구 사이의 일이고, 밀정히 지어진 기숙사의 사용허가 문제에 이를 끌어들이는 것은 구청의 부당한 처사라는 것이 법인과 학교의 입장이다. 사이에 끼어 있는 기숙사는 스스로 협상에 나설 수도 없으니 상위 기관들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형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정말 구청과 법인, 대학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뿐이다.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상대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여겨져도, 스스로의 주장을 일부라도 굽히는 것 또한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 성과가 없이 헤어지더라도 지속적으로 모여서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

주거는 안정적인 삶의 기본 조건이다. 학생들이 삶의 기반이 흔들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진 채로 온전히 오늘을 살고 내일을 계획할 수 있을까? 배신감을 느끼는 지점은 학생들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관계기관들의 태도에서 문제에 대한 진지한 의식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었다. “현재로서는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기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다. 시민이 납세를 하고 학생이 등록금을 낼 때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보다는 나은 답변을 기대했을 것이다.

논의의 주체들이 모여 앉아 목을 꼿꼿이 세우고 “뭇 먹어도 고”를 외치고 있을 때 판돈으로 올라간 것은 학생들의 주거안정이다.

의(전학대회)를 통해 총장 선출의 민주적 과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중집위 인준부터 총장선출 결의안까지/고대신문, 2018.05.09**) 기존의 총장후보추천위원회 중심이 아닌, 학생의 표결영향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택된 결의안은 대학본부와 법인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학대회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제50대 서울총학생회는 올해 12월에 예정된 총장선출에 대비하기 위해 총장선거 TF를 구성했다. 총장선거 TF는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의 참여도 포함하는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됐다.

홍익대 역시 지난 3일 진행된 서울캠퍼스 전체학생총회를 통해 학생참여 총장직선제 시행 촉구안이 가결됐다.(**서울캠퍼스 전체학생총회 열려/홍대신문, 2018.05.08**) 학교 운영에 있어 전체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한 총학생회는 “학교가 안전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오는 2학기에 농성 진행, 국민탄핵 등을 포함하는 공동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어 적립금의 개선과 총장직선제를 요구하는 거리행진이 진행됐다.

숙명여대 백경일 법학부 교수가 강의 도중 성차별

발언을 일삼아 법과대학 학생회는 본부에 ‘교원 징계 위원회에 학생위원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교단에서 행해진 성차별, 징계 요구의 목소리 커져/속대신보, 2018.05.07**) 이어 ‘교원에 대한 징계규정’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백 교수는 지난 3월부터 지속적으로 강의 중 성차별 발언을 했다.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잔인한 사진자료를 사용하는 등, 적절치 못한 수업자료를 배포해 다수의 수강생이 불편함을 느꼈다. 백 교수는 지난 3일 간담회를 통해 잘못을 시인하고 학장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화여대에서는 지난달 2일 무용과 탈의실과 체육관에 여장남자가 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엔 여장남자 탈의실 난입...커지는 불안감/이대학보, 2018.05.07**) 이화여대는 교내 건물에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총무처 총무팀에 의하면 한 달 평균 45건의 외부인 난입 신고가 접수된다. 최근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예민함이 커진 만큼 학생으로부터 외부인 출입을 강하게 제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총무팀은 “외부인 출입에 대해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라 밝혔다.

변화의 성공은
철저한 자기 반성으로부터

세시봉

박지영 <편집장>



‘언론의 위기다.’ 언론사들이 비명을 외치는 가운데 유튜브 채널 10만 구독자를 달성하며 해답의 실마리를 찾은 곳이 있다. SBS 뉴미디어 자회사인 ‘스브스 뉴스’다.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어도 살아남기 힘든 유튜브에서 언론매체의 10만 구독자 달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너도나도 뉴미디어를 외치던 2016년, SBS는 기존 보도국을 보도국, 뉴스제작국, 뉴미디어국으로 개편했다. 중앙일보, 조선일보와 같은 언론사 또한 ‘온라인 퍼스트’를 지향했지만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SBS는 기존의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만드는 것에 집중했다. 기존 방식을 탈피한 효과는 결과로 나타났다. 뉴스에 관심이 없다고 여겨지던 10대 독자가 지 잡았으니, 말 다한 셈이다.

‘대학의 위기다.’ 26만 명에 달하는 학령인구 감소는 피해갈 수 없으며, 4차 산업 혁명 도래에 따라 지금까지 축적해왔던 교육 노하우에도 대대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필연적이다. 올해를 기점으로 향후 5년 안에 가시적인 위기 징후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며 시급한 변화를 강조하는 이들도 있다. 우리학교도 다가오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은 피해갈 수 없다.

그간 누구보다 깊은 고민을 해왔던 것은 대학본부다. 융합인재를 원하는 시대상에 맞춰 ‘융합전공’을 도입했다. 작년 신설된 소프트웨어융합학과는 ‘다변화하는 미래 산업수요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들이 진정 미래에 대한 참된 고민에서 나온 해답인지는 의문이다. 융합전공의 배경에는 교육부 대학 학사제도 개선안 발표가 있었으며, 소프트웨어융합학과 또한 시작은 프라임 사업이었다.

위기를 타파하려면 이런 산발적인 대응이 아닌, 객관적으로 우리학교를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수많은 외부 평가에 비취진 상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의 각종 사업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학교의 문제점과 마주해야 한다.

프라임 사업 실패 원인을 단순히 ‘소통’ 부족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저평가를 받았는지, 계획을 어떻게 적용할지 철저한 고민이 필요하다. 2014년, 전에 없던 재정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발표한 ‘대학 행정 및 재정발전 계획안’도 마찬가지다. 계획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변화한 환경에 맞맞는 전략인지 고민해야 했다. 그것이 진정한 고민의 시작이며, 새로운 변화의 초석이다.

SBS가 뉴미디어국을 신설했을 때, 어떤 언론이 뉴미디어 시대가 올 것을 몰랐겠는가. 떨어지는 신문 판매부수, 바닥을 치는 언론의 신뢰도 등 치열한 자기반성의 계기는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마주하지 않았다. 변화를 일으키자니 그간 쌓아온 것을 잃기는 싫다고 생각했으리라. 그 찰나의 머뭇거림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 언론은 네이버와 페이스북에 운전대를 넘겨주고 그들의 눈치를 보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결국 더 많은 것을 잃은 셈이다. 개교 70주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우리를 제대로 보고 있는가.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좌측상단 기사제보



결국엔 ‘콘텐츠’ … 다양한 관심사 충족시키겠다

창간 63주년 기념 이용자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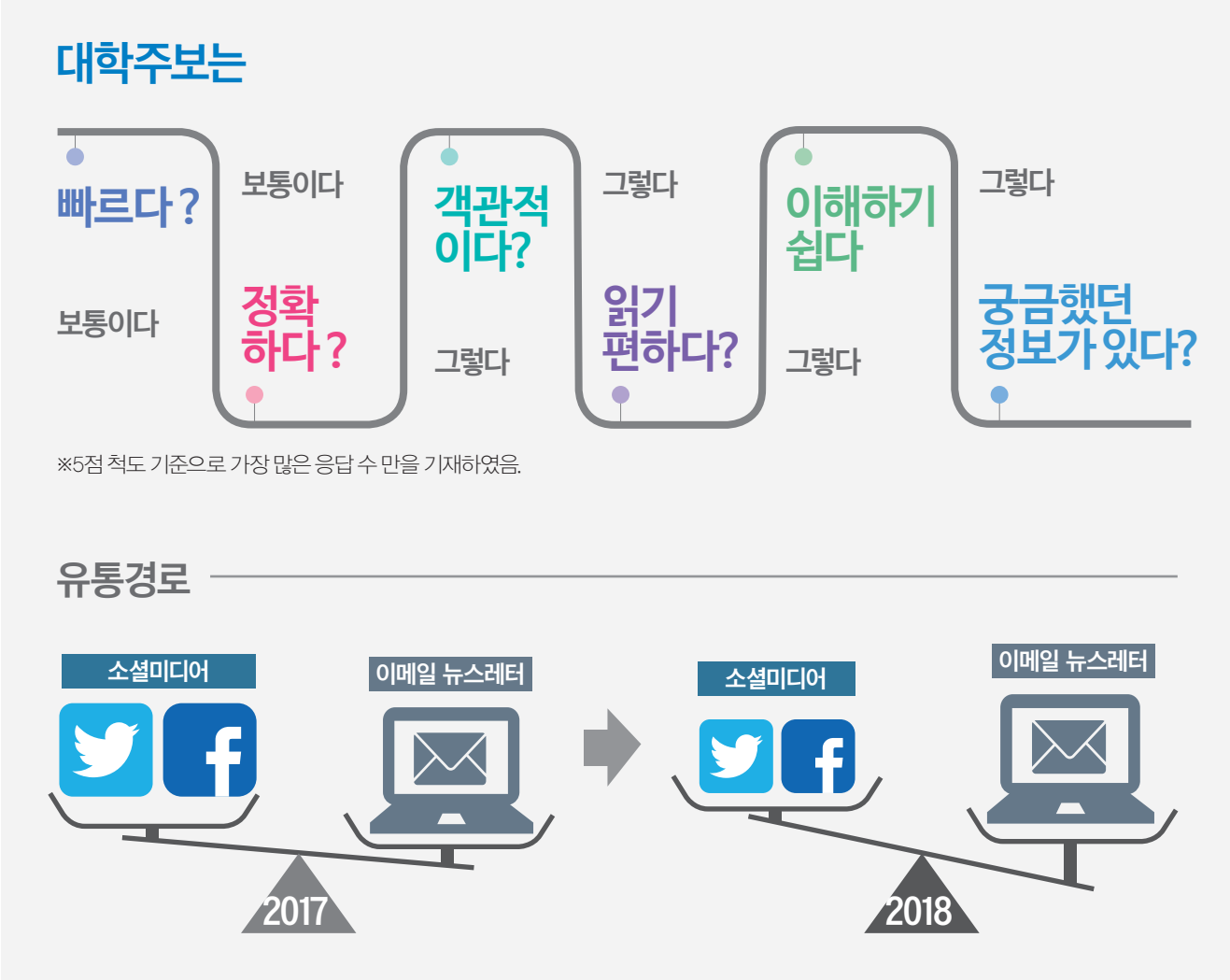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우리신문이 창간 63주년을 맞이해 연례 구성원 미디어 이용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독자들은 보다 ‘다가오는 미디어’를 원함을 알 수 있었다. 지난 2013년 이후 대학주보는 변화하는 미디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퍼스트’로 전환을 꾀했다. 2015년부터는 지면 격주 발간으로 전환하며 온라인 유통 체계에 더 힘을 쏟는 등 혁신을 시도했다. 독자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신문이 택한 혁신의 길이 맞는 방향인지 짚어보고, 보완점을 알아보기 위해 연례 구성원 미디어 이용 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진행된 설문 결과, 총 107명이 응답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에 이어 최근 2년간 우리 학교 구성원들의 미디어 유입경로가 이메일 뉴스레터로 공고해졌다는 경향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학내 뉴스를 접하는 이용자 86명 중 52명이 이메일 뉴스레터를 통해 소식을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주보 이용자 역시 패턴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학주보를 알고 있는 100명 중 47명이 정기적으로 발송되는 이메일 뉴스레터를 통해 소식을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인터넷과 모바일이 뉴스 소비의 주류로 부상한 이후 한때 주목받았던 것이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다. 기존 미디어가 지향했던 ‘다수’와 ‘대량’이 아닌, 타겟팅 된 수용자의 선호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네이버 뉴스스탠드와 같이 사용자가 직접 관심 뉴스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의 취향에 맞는 뉴스를 전달하기도 한다. 비록 선호 정보만 사용자에게 도달해 이외 정보로부터 고립되는 ‘필터버블’ 문제가 있긴 하지만 버즈피드, 피키캐스트 등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를 위주로 성장한 미디어도 존재한다.

이메일 뉴스레터 서비스 역시 뉴스 큐레이션의 연장선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용자



“

뉴스 큐레이터 시대, 독자 맞춤형 기사 전달을 위해 노력 할 것

”

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다. 우리신문 뿐 만 아니라 본부도 최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센터가 제공하는 이메일 뉴스레터를 살펴보면 우리학교 관련 뉴스, 교육계 뉴스, 일반 이슈 중 우리학교가 중점을 두는 분야에 대한 뉴스들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체육대학 체육부가 소속 팀 경기 소식을 모아 전달하기도 한다. 이용자는 선호에 따른 기사를 선택해 볼 수 있다. 반면 우리신문 이메일 뉴스레터는 우리신문이 최근 발행한 온라인 뉴스 중 중요하다고 판단한 기사 하나씩을 실어 주당 약 3번 발송한다. 사용자 맞춤형 뉴스 또는 선호 정

보 제공이라는 뉴스 큐레이션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으나 독자에게 꾸준히 우리학교와 관련된 뉴스를 제공하고자하는 노력 중의 하나이다.

사실 이는 떨어지는 대학주보 홈페이지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책이기도 하다. 대학주보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할 정도의 열독자는 비율은 매우 낮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주보는 2013년 학보사 최초로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했다. 이후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채널을 확장하기도 했지만, 홈페이지로의 큰 유입요인은 되지 않았다. 지난해 초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에브리타임 게시판 운영 등 SNS 채널을 추가

했지만 성과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현재 대학주보의 메인 SNS 채널인 페이스북 역시 국내 사용자 감소세와 개인정보 유출 악재가 겹쳐 초창기만큼의 반향은 보이지 않고 있다.

뉴스레터 콘텐츠뿐만 아니라 개봉률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뉴스레터 개봉률은 메일 당 통상 20% 내외다. 개봉이 직접적인 링크 클릭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뉴스레터는 독자에게 대학주보로의 접근을 도울 뿐, 직접적으로 독자를 끌어들이지는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결과는 돌고 돌아 결국 ‘콘텐츠’에 집중해야 한다는 방향을 독자가 제시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독자들이 대학주보를 찾아올 수 있을만한 매력적인 콘텐츠 또한 갖춰야 한다는 얘기다. 이종혁(언론정보학) 교수는 “대학주보는 특성상 SNS에서 충족되지 않는 부분을 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상적인 정보교환이 아닌 대학이슈나 정책과 같은 핵심이슈에 대한 공론장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서는 의제 설정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또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되지 않는 정보들, 구성원도 헷갈리는 정보들, 토론이 필요한 정보들 등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문 응답자들은 ▲정책·제도 ▲교육 ▲학술·연구 ▲경영·행정 ▲학생·학생회 ▲취업 순으로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 우리신문은 ▲학생·학생회 ▲정책·제도 ▲경영·행정 ▲교육 순으로 많은 기사를 내보냈다. 다양한 주제로 다가가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 지점이다.

올해 설문에 추가한 독자의 대학주보에 대한 주관적 인식 질문에는 다행히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독자에게 더 다가가는, 독자를 더욱 끌어들이 수 있는 콘텐츠를 선보일 것임을 다짐한다. 앞으로도 학내 구성원의 꾸준한 관심과 질타를 부탁드리며 대학주보에 보내준 신뢰를 배신하지 않도록 진력할 것이다.

표절의 늪에 빠진 인터넷신문, 학보사 기사까지 도용

최명규 기자 gyumyeong@khu.ac.kr

한 인터넷신문이 학보사 기사를 무단 도용한 일이 드러나면서 인터넷신문에 만연한 표절 실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28일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서언회)는 우리신문 기사(오늘도 불법 위에 잡드는 세입자들, 아무도 그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대학주보 제1628호 4.5면, 2017.12.04)를 포함해 모두 10개 학보사, 50여 개의 기사가 무단 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도용을 자행한 인터넷매체는 N신문으로 무단 전제, 일부 편집을 통한 표절 등 학보사 기사를 도용했다. 서언회는 향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N신문에게 표절기사 삭제와 재발방지 공개사과를 요구할 방침이다.

서강대 서강학보 장채원 편집장은 “학생 기자의 땀방울이 모여 만든 결실을 무단 도용한 점은 언론 윤리강령뿐만 아니라 개인의 도덕적 사명감에도 반하는 일”며 “이런 일은 한국사회가 지닌 저작권 인식 부재를 단적으로 시사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0일 N신문은 사과문을 통해 도용을 인정하고 해당기사 삭제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또한 도용을 한 자사기자에게 경고조치를 비롯해 일정기간 기사송고 금지와 제명 등을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N신문 발행인 김 씨는 “학보사 기사가



일반대중에 보급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에 기사를 가져다 쓰게 됐다”며 “스스로 편집자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신문 수익구조가 한정돼 있는 만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언회는 N신문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언회 이민준(고려대) 회장은 “N신문 측 사과는 현 상황을 면

피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도용한 기사를 전부 삭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과와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12월에도 N신문은 지난해 서울대 <대학신문> 기사 상당수를 무단 도용했다가 대학신문 측 항의로 해당 기사를 삭제한 전력이 있다. 4달여 만에 다시 벌어진 학보사 기사 표절사태에서, N신문이 기사전

문을 제목만 바꾼 채 자사 기사인양 기재한 일도 확인돼 저작권 침해와 언론윤리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보사 기사까지 무단 도용의 대상이 됨에 따라 인터넷신문의 언론윤리의식 부재가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비단 이번 일뿐만 아니라 인터넷신문이 표절문제에 둔감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터넷신문위원회(인신위)가 지난 4월 6일 발표한 2017년 인터넷신문 기사심의 결과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신문이 가장 많이 어긴 심의조항은 ‘표절금지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절금지 위반 적발 건수는 모두 1,480건으로 전체위반 3,360건의 43.8%에 달한다. 또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인신위 인터넷신문 기사심의 결과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표절금지 위반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다. 2015년 901건이었던 표절금지 위반은 2016년 1,107건, 2017년 총 1,47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위반 사항 중 표절금지 위반이 차지하는 비율도 최근 3년간 각각 28.0%, 34.3%, 43.8%로 증가했다.

이수중(언론정보대학원) 교수는 “표절 위반 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언론의 책임에 대한 신념과 공감의 열마나 인터넷신문에 부족함을 보여 준다”며 “표절이 근절되지 않으면 언론체제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인터넷신문들이 이를 자각하고 저널리즘적 사명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기구는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표절문제에 대한 연구기회 제공과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강화해야한다”며 “해당교육을 통해 매체 스스로가 언론 윤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

개교기념특집

개교기념특집

기부금 발전 방안

안나연 기자 na@khu.ac.kr
장유미 기자 yummy0825@khu.ac.kr

“현재 우리 단과대학 리모델링할 돈도 없 다. 공부하는 환경이 열악해서 학생들의 불 만이 많은 것은 알지만 외국어대학 발전기 금 만으로는 리모델링이 불가능하다. 그래 서 외국어대학이 학교로부터 받는 예산을 매년 1,500만원씩 10년간 감축하고 이를 리 모델링 하기 위해 ‘가불’했다.” 외국어대학 송혜경 행정실장은 발전기금 부족으로 리모 델링이 어려웠다는 점을 말했다. 외국어대 는 누적 발전기금액 약 4억 9,700만 원으로 23개 단과대학 중 5번째로 낮다.

반면으로 한의과학대의 누적 발전기금액 은 약 81억 4,700만 원으로 우리학교 총 23 개 단과대학 중 1위다. 2위인 의과대학·의학 전문대학원의 누적 발전기금액은 약 59억 6,400만 원으로 한의과학대와 약 20억 가량 차이난다. 한의과학대는 누적된 발전기금을 바탕으로 ‘본초학 교실’ 등 특정 교실을 지정 해 연구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한의대 차 원의 장기연구를 이어가는 데에도 기금을 사용한다.

또한 간호과학대학은 지난해 행정실이 ‘설립 50주년 기념 사업’을 진행해 약 25억 7,000만 원의 기금을 모금했다. 이는 간호과 학대학의 신축관으로 이전하기 위해 주로 사용됐다. 간호과학대학 행정실은 “작년에 단과대 이전과 50주년 사업을 진행해 동문 들이 많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대학모금가포럼 박중배 회장은 “대학의 재 정적 어려움은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교 육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등 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발전기금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 다”고 말했다.

**전문인력 없는 단과대
적극적 모금 유도 어려움**

우리학교 단과대는 발전기금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 문의 기부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홈커밍 데이’와 같은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한 동문 네트워크의 유지를 통한 지속적인 기부금

유입을 돕는다.

경영대학 박상우 행정실장은 “단과대 동 문회, 학과 동문회를 통해 동문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 자발적인 기부 분유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스승의 날 캠페인을 개최 해 사회적으로 성공한 동문 및 교수님들을 초대한다”고 말했다. 문과대학 행정실 또한 “각 학과 교수님들이 동문캠페인을 주최해 졸업생, 동문인 교수 등에게 기부를 독려하 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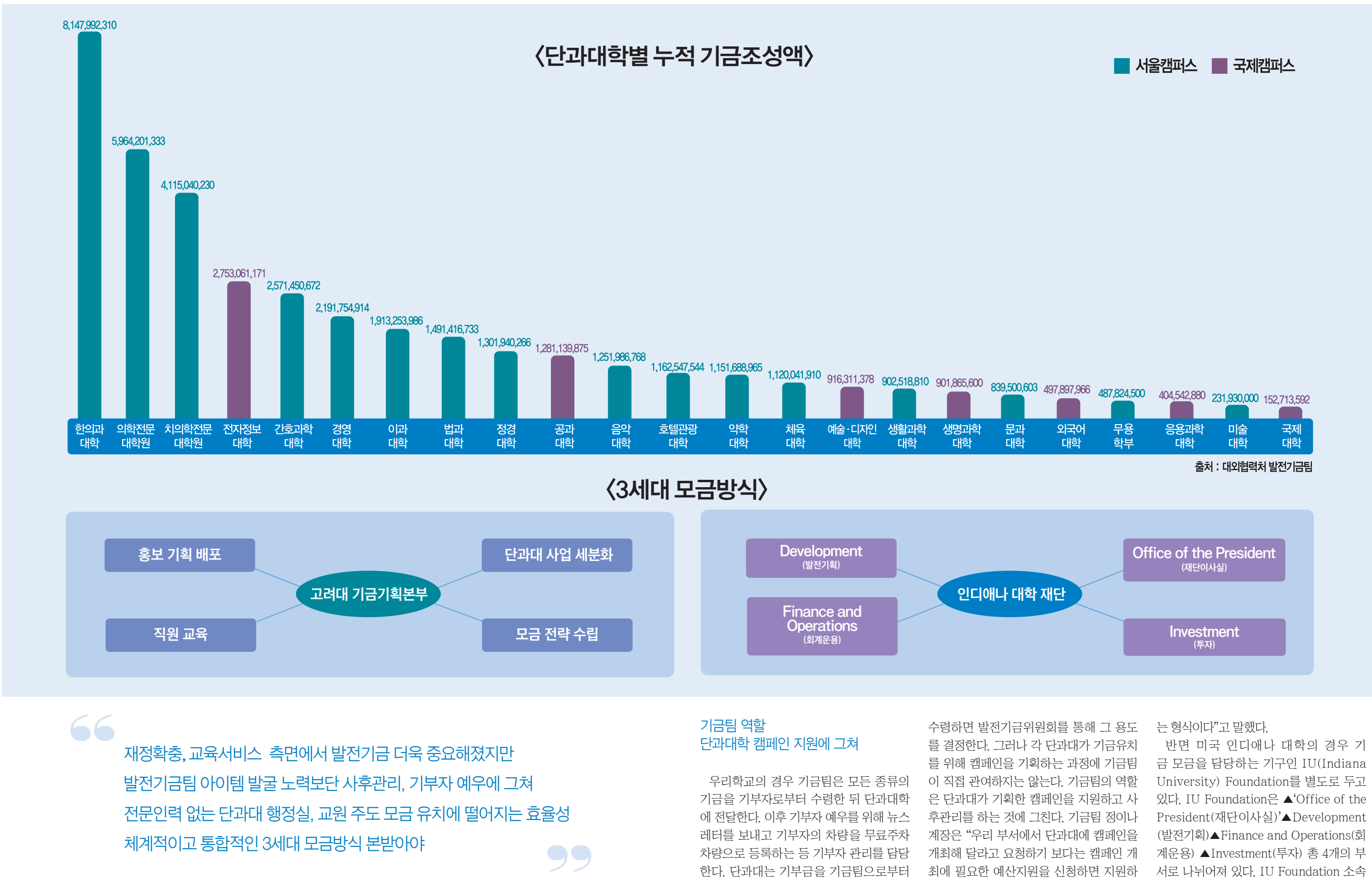
약학대학도 마찬가지다. 약학대학 김동 철 행정실장은 “지난 달 20일 모교방문 캠페인을 통해 동문들의 기부를 유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과대의 노력만으로는 효과적 기 금 유치에 한계가 있다. 경영대학 박상우 행 정실장은 “단과대 행정실의 경우 기금 모금 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교수진도 교육과 연구에 보다 신경 써야 하 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모금을 유도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금 모금을 위한 전문 인력이 부 재한 단과대 행정실은 ‘단과대 설립 및 십 주년 기념’, ‘새로운 건물 증축’ 등 특정한 계 기가 생길 때만 기금유치를 위한 캠페인을 기획한다. 우리학교 대외협력처 발전기금팀 (기금팀) 역시 이와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기금팀 김동선 부처장은 “단과대학은 우선순위가 사무행정과 교육·연구”라며 “전 문성 없이 기금 모으는 일을 하기는 쉽지 않 다”고 말했다.

보전복지부 산하의 기부환경 개선을 위해 설립된 한국모금가협회 황신애 상임이사는 “모금의 주체는 대학이 맞지만 과적이 부자 유치와 흡사해 인간관계기술 등 전문성이 요 구된다”며 “그러나 현재 다수의 대학은 이 러한 역량이 부족한 직원이 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상임이사는 “대학 내에서는 빈번한 인사이동이 이루 어지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필요한 모금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며 “장기 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치할 필요 가 있다”고 말했다.

대학모금가포럼 박 회장 또한 “모금은 전 문성과 윤리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모금부서에 대 학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 해야 한다”며 모금부서의 책임과 전문성을 강조했다.



기부금 목표액 ‘1,000억’ … 체계화된 모금 계획부터 수립해야

설지영 기자 jy0622@khu.ac.kr

대학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학교 기부금은 약 182억 원으로 전체 재정수입의 약 3.5%를 차지한다. 우리학교 는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에 이어 사립대 학 중 4번째로 기부금이 많다. 하지만 고려 대 약 415억 원과 약 연세대 약 328억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 2월 합동교무연구위원회에서 발표된 ‘재정·인프라 구축 계획안’에 따르면 재정 악화를 해결하고 재정다변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기부금 확대’를 선택했다. 현재 수 준의 약 5배에 달하는 1,000억을 목표로 잡 고 기부금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학교는 ‘경희 라이언 일만인 클 럽’과 ‘경희 라이언 스포터즈’ 등 기부 포 트그램을 진행한다. 이는 매월 된 원 이상의 금액을 자동으로 기부하는 방식으로 소액 기부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100만 원 이상 기부했을 때 청문관 로비에 이름을 남 겨주는 ‘글로벌트러스트기금’도 있다. 하 지만 우리학교의 기부 캠페인을 살펴보면

소액 기부를 중심으로 진행해 거액 기부금 유치를 위한 모금 캠페인은 미비하다. 발전 기금팀 김동선 부처장은 “일반 발전기금에 서 거액 기부는 희박한 상황”이라고 말했 다.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모금 전략의 필요 성을 역설한다. 대학모금가포럼 박중배 회 장은 “대학이 기부금 수입을 확대하기 위 해서는 모금조직과 리더십이 중요하다”며 “모금 목표와 기간을 설정해 대학본부, 단 과대학, 동문이 서로 협력해 전략적인 모금 캠페인이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 여 “모금에 대한 명분이 확실해야 한다”며 “기금을 가지고 어떤 교육과 연구를 진행 할 것인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용 계획 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 계획은 기본

실제로 고려대의 경우 대학본부 차원에 서 학교 방향성에 맞는 중장기 모금 계획 을 먼저 수립한 후, 그에 맞춰 단기 계획을 세운다. 지난 2015년부터 고려대는 거액기

부 유치를 위해 총장 직속 산하기구인 ‘기 금기획본부’를 새로 설치했다. 이를 통해 총장이 중장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후 기금 모금의 구체적인 계획을 대 학본부에 수립한다. 고려대학교 기금기획 본부 김민구 수석 컨설턴트는 “학교와 모 금 비전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총장 이 학교의 비전을 설정하면서 모금 비전 도 함께 기획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려 대는 ‘SK 미래관 건축 기금 캠페인’, ‘SK 미래관 기동 세우기’, ‘Vision 2020 핵심 모금 캠페인’ 등 거액 기부금 모금을 진행 하고 있다. 그 결과 고려대 모금 약정액은 2015년 572억 원에서 2017년 1,107억 원가 지 증가했다.

연세대와 중앙대 역시 중장기 모금 계획 을 세운다. 연세대는 ‘백양로 재건축 프로 젝트’이행을 위한 모금 캠페인을 진행했 다. 이렇게 진행된 모금 운동은 지난 2012 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약 504억 원을 모금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중앙대 는 오는 10월 개교 100주년을 맞이해 ‘100 릴레이 기부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

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은 기부 자가 기부를 하며 다른 기부자를 추천하는 방식이며 100억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체계적인 계획을 기부자에게 알리 는 것 역시 중요하다. 한국모금가협회 허탁 이사장은 “국내 대학은 많은 기부금을 모 으는 것이 총장의 실적이 되기 때문에 단기 간 모금 조성에만 힘쓰는 경향이 있다”며 “그렇지만 기부자에게 장기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기부금 사용내역을 명 확하게 밝히는 것 역시 기부자에 대한 예우 이다”고 말했다.

기부자와 소통 신경써야

서강대는 개교 50주년 모금 행사를 진행 하며 기부자와의 소통을 강화했다. 그 결과 기금 조성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서강대는 지난 2010년 개교 50주년을 맞아 거액 모금 캠페인 ‘Making History’와 소액 모금 캠페인 ‘Live A Name in Sogong(LAN)’이 라는 모금 캠페인을 진행했다. 서강대는 이

캠페인을 위해 동문 800여 명으로 이뤄진 ‘발전위원회’를 조직했다. 기부자가 될 수 있는 동문을 모금 캠페인 위원으로 구성했 다. 또한 초청 행사를 개최해 학교 발전 비 전을 제시하고 비전이 구체화되기 위한 자 금 조달 계획 등을 발표했다. 결국 2009년 10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진행된 ‘Making History’ 모금 캠페인으로 목표금액인 50 억 원의 2배가 넘는 107억 원을 모금했다.

개교 70주년, 모금 계획은?

한편 지난 3월 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박 영국 대외협력부총장은 “재정운용 유연화 를 위해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을 개교 70 주년에 맞춰 대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오는 2019년이면 개교 70 주 년이지만 이에 맞춘 기부 캠페인조차 설립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대외협력부총장실 은 “대외협력부총장실은 기부금 조성의 컨 트롤타워 역할을 할 뿐”이라 밝혔다. 대외 협력처 역시 개교 70주년에 맞춘 구체적인 모금 계획을 밝히지 못했다.

발전가능성 중심으로 홍보하는 브랜드레이징, 모금 마케팅의 시발점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브랜드와 펀드레이징의 합성어인 ‘브랜 드레이징(Brandraising)’은 침체된 펀드 레이징에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 다. ‘아름다운재단’은 이러한 ‘브랜드레 이징’을 잘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전현경 간사에게 브랜드레이징을 대학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물었다.

- 브랜드레이징은 무엇인가?

비영리 단체가 모금을 하기 위해서 브랜 드 마케팅이 수반돼야 한다는 개념이다. 광고하 기 많은 기관이 모금을 하고 있기 때 문에 기부자나 일반 대중은 하루에도 수 십 건의 기부 요청을 받는다. 기부자는 어디에 기부할지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 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있는 곳에 기부 하거나 아예 기부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브랜드레이징은 우리 기관이 하고 있는 일을 일관성 있게, 지속해서 노출함으로

써 기관에 대한 관심과 신뢰를 바탕으로 기부를 이끌어내는 일이다.

사실 주어진 일을 하기도 바쁘는데 홍보 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힘들다. 그러나 브랜딩을 꼭 정해진 틀 안에서만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통합적으로 바라본다면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기관의 브랜드 도 높이고 결국엔 기부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그렇다. 중장기 계획이 우선이며, 기본적 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학교를 예를 들 어보겠다. 건물 건축을 앞두고 모금을 하 자고 결정한 그때부터 기부자를 찾기 시 작하는 것은 단기적인 계획이다. 중장기 계획은 당장 모금을 하지 않을지라도 재 학생, 학부로부터 시작해서 화장실만 이 용하고 나가는 사람에게도 우리학교를 인식시키는 것이다.

우리학교가 어떤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기부를 하면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음을 지속해서 노출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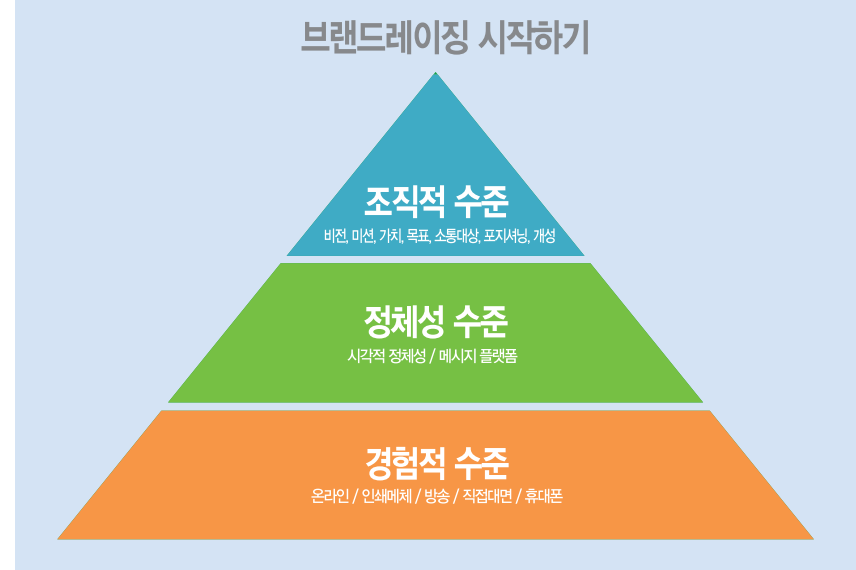
그리고 이를 어떻게 노출할지를 고민해 야 한다.

브랜드레이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을 바꿔야한다’는 것이다. 재학생, 동문에서부터 스쳐지나가는 사람까지 학 교를 경험한 모든 사람에게 ‘기부를 하면 학교가 더욱 발전할 것이다’라는 모습을 일관성 있게 보여줘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조직적 과정 이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하고, 맨 아래에 있는 경험적 과정이 실제로 기부자, 대중 과 접점을 가지는 마지막 단계라고 보면 된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사람들에게 인식되 어야 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모습을 결정 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조직의 비전, 미션, 가치, 개성 등을 고민해 볼 수 있겠 다. 시각적 정체성과 메시지 플랫폼 등도 고민해 볼 수 있겠다. 인위적일 수는 있겠 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일관성 있게 보여 주기 위해 일종의 틀을 정해야 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시각적으로는 학교의 대표색 결과 글씨체 등 톤 앤 매너를 정하는 과정 이 필요하다.

전달할 메시지 안에도 교육철학을 강 조할 건지, 학교가 배출한 졸업생의 성과 를 강조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를 전달할 때 어떤 슬로건을 사용할 것인지도 정해야한다.

민족의식을 지향하는 대학이라면 슬로 건에 왜애하는 쓰지 않는 등 디테일이 필 요하다.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어떤 채널 을 통해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구 체적인 지침도 있어야 하겠다.

우리에게 필요한 통일은?

전문가 칼럼

이창희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진행한 ‘2017 통일외식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20대 청년들의 33.9%가 별로 또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연령대별 응답에서 통일에 가장 부정적인 세대가 20대였다. “통일이 언제쯤 가능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29.2%를 차지하여 연령대별 수준에서 가장 높았다. 혹자들은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젊은 세대는 통일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분석하고, 미래의 통일이 더욱 어렵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여론조사와 분석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청년들이 어떤 통일을 전제로 대답했는가를 되짚어 봐야한다. 통일한국의 체제를 묻는 질문에 청년층의 42.3%는 남한 현 체제로의 통일을 원했고, 42.7%는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 것으로 대답하였다. 젊은이들은 대체로 남한 체제로의 통일이나 남한 및 북한 체제의 장점을 절충한 모습을 통일의 모습으로 전제하고, 그러한 통일이 필요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여긴 것이다.

한반도 평화의 의미

현재 청년들이 학습한 교과서에서 제시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사실상 높은 수준의 정치적 통합을 추구한다. 교류협력단계-남북연합단계-민주국가통일의 3단계로 진행되는 통일과정에서 최종 목적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유행한 ‘북한 붕괴론’에도 아랑곳없이 유지되는 북한의 모습,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핵과 미사일 실험까지 진행하는 모습을 보며 성장한 것이 현재 청년이다. 북한이 갈등, 대결을 연출하는 현실에서 하나의 체제, 또는 절충적 체제로 통일되는 것이 힘들



남북정상회담은 ‘사실상 통일’의 조짐을 보여준다.

(사진=중앙일보DB)

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청년들이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무어라 대답했는지에 주목해야 한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이 되어야 한다”를 택한 20대는 연령대별 수준에서 가장 낮은 반면, “남북 간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답한 20대는 연령대별 수준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지금의 청년들이 원하는 통일의 본질이 평화임을 의미한다.

과거 독일 분단시절, 1969년 빌리브란트 서독수상은 동독을 인정하면서 분단의 평화적 관리를 통한 긴장완화를 꾀하고자 ‘신동방정책’을 수립하였다. 신동방정책은 하나의 체제로 법적인 국가통일을 강조하지 않고, 평화를 강조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한 간접적이고 점진적인 민족통일을 추진한 정책이었다. 여기서 비롯된 개념이 동서독 주민들이 교류와 협력을 하면서 공동번영을 꾀하는 ‘사실상의 통일’이다. 이러한 ‘사실상의 통일’ 개념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아들여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남북 교류협력의 시대를 열었다. 남과 북이 모두 이익을 실현한 ‘개성공단’ 등이

성과였다.

이를 보며 성장한 대학생들은 ‘사실상의 통일’ 개념을 선호한다. ‘결과로서의 법적 통일’에 얽매이지 않고, ‘과정으로서의 공존·상생 통일’을 이미 평화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높은 경제성장의 부유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불투명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분단에서 비롯된 ‘코리아 리스크’ 등으로 미래의 전망이 더욱 불확실해지는 상황을 원치 않기 때문에 평화를 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바람이 모여서 이제 한국 사회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려 한다. 지난해 4월 전쟁위기설, 8월 전쟁위기설을 딛고, 12월 한미군사훈련의 연기를 통해 극적으로 올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을 참가시키면서 평화이벤트를 성사시켰다. 그렇게 조성된 한반도 평화 국면을 남북정상회담 합의로 발전시키면서, 북미정상회담 국민까지 도출하여 지속적인 평화 평화분위기를 연출하였다. 4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합의되어 발표되었다. 개성 연락사무소 설치 및 다방면적인 교류협력 등 남북 관계 개선과 발전,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전쟁 위협의 실질적 해소,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 및 종전선언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의 통일’ 국면이 재현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물론 당면 한반도 평화적 전환기의 1차적 마침표는 북미정상회담이다. 완전한 비핵화를 놓고 속도와 보상에서 북한과 미국이 품고 있는 생각이 다르지만, 현재까지 대체로 잘 진행되고 있다. 다렌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재확인하였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을 재방문하여 김정은과 대화한 후, 역류된 한국계 미국인 3명이 석방되었다.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6월 12일 싱가포르로 결정되었다. 남은 것은 트럼프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 선언, 평화협정, 북미수교, 대북제재 해제 및 보상 등의 시간표에 합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개막에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도 밝게 조성될 것이다.

참여마당

박경규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경희학원지부장)



70년만의 총장선출제 논의를 바라보며

지난 대학평의위원회와 법인이사회에서 총장선출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와 제안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먼저 이러한 구성원들의 관심 그리고 법인과 대학 측의 성의 있는 태도를 환영한다.

현재까지 우리 대학은 총장선출제가 아닌 총장선임제를 채택해 왔다. 물론 총장을 구성원이 민주적으로 선출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임명한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총장선임제는 우리 대학의 창학이념과 교훈에 위배되는 제도가 아닐 수 없다. 어떻게 이러한 비민주적인 제도가 민주주의를 말하는 우리대학에서 지난 70년간 유지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속도를 내어, 우리 대학의 높은 이상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제도를 만들었으면 한다.

대학평의위원회에서 학생, 교원, 직원, 동문 구성원 대표들이 합의한 총장선출제안을 나는 존중한다. 이 안이 완벽해서가 아니다. 대의민주주의 체제라고 할 수 있는 구성원의 협의체에서 올바른 절차를 통해서 합의된 안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남아있다. 우리가 70년 가까운 경희학원의 역사에서 총장선출제를 하지 못한 것은 안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안은 이미 존재해 왔다. 문제는, 이 안이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이사회와 총장이 구성원 단체의 합의안을 받아들이 의사가 있는가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사회와 총장이 개교 70주년이 되기 전에 대학을 공공에게 돌리고, 민주적인 대학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길 간절히 바란다.

보잘것없는 내 생각을 보낸다면, 나는 기존의 합의안에, 이번엔 문제인 대통령께서 제안한 헌법 개정안처럼 ‘4년 중임제’ 혹은 ‘4년 연임제’를 추가하길 제안한다.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도, 대통령이 집권 3,4년이 지나면, 자기 말만 하는 시기가 도래한다고 한다. 그 독신을 극복하지 못한다. 비교적 민주적이었다고 평가받는 대통령들도 그러한 비판을 벗어나지 못했다.

행정권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도 그럴진대, 대학의 총장은 입법, 사법, 행정을 한 손에 쥐고 있는 형상이다. 여기에 최근 법인의 인사권한이 대학으로 넘어왔고, 감사기능까지도 대학에 의존하고 있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다. 역사를 통해 볼 때, 이는 거의 진리에 가까운 듯하다. 선출되며 견제 받는 권력조차도 부패할진대, 선출되지 않으며 견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으며, 그 자체가 민주주의와 정확히 역행한다. 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최대 8년간만 총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 물론 연임하는 경우에도, 중간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구성원들은 기나긴 말잔치에 지쳐왔다. 이사회와 총장께, 우리 대학을 민주적인 총장선출의 기반위에 올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거의 유일한 학내 언론인 대학주보도 사명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구성원들에게 말하고 보여주고 들어주길 기대한다. 우리 전국대학노동조합은 70년 민주사학, 명문사학인 우리 경희대학교가 ‘학원의 민주화’의 꽃인 민주적인 총장선출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오윤자의 마음 코칭 - ⑤

열려라 참귀(耳) 독심술 아닌 공감적 듣기



오윤자 교수
(아동가족학)

“말을 해도 통하지 않아요. 조별과제를 하는데 조원이 도통 답도 없고 불만이라도 얘기하면 좋을텐데... 부모님께서는 모처럼 용돈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맨날 돈이나 마... 동아리회의에서 의견 냈더니 필요 없는 말만 한다고 화부터 내거나 자기말만 할 뿐. 제가 외계어라도 하는 건지, 스마트폰이 최고예요 제가 얘기하면 그대로 듣고 도와주니까.”

의사소통을 잘 하려면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다. 어제 하루 누구랑 어떤 얘기를 나누었는지 잠깐 생각해 보고, 많은 이야기를 했다면 소통의 정도는 어땠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자. 오래 전 TV 오락프로그램 중 청춘남녀가 사랑의 작대기를 굶던 프로그램이 있었다. 대여섯명이 한 줄로 서서 제시된 단어를 뒷사람에게 전달하는 게임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었다. 서로 작대기가 그어져 한 쌍이 되거나 단어를 온전히 전달한 소통을 보면 거의 모든 출연자들에게 공감하는 능력을 보이는 경우거나 온 마음과 몸으로 듣기를 한 경우였다. 우리 생활은 TV 속 오락 프로그램보다 훨씬 중요하지만, 한 쌍이 되

거나 문장을 완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왕왕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의견을 나누는 행위를 ‘말한다, 이야기한다, 대화한다, 의사소통한다’고 표현한다. 살펴보면, 이 모든 행위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누군가와 서로 한다는 행위, 즉 혼잣말이 아니라 주고받음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역사적으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올라간다. 이들은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모로 하여금 상호교류하며 자녀를 양육하도록 지도했다. 번(Berne)은 의사교류를 3가지 형태로 설명하고 있다. 상보적 의사교류는 평행적·무갈등교류로 관계를 유지하며 대화가 이어지는 형태다. “기말고사는 몇 문제인가요?”, “30문제입니다”의 형태가 대표적이다. 교차적 의사교류는 소통의 방향이 서로 어긋나는 형태의 갈등교류다. 예를 들면, “지금 몇 시니?”, “넌 시계도 없니?”의 모양이다. 특정주제에 관한 의사소통이 즉각 중단되기 일쑤이다. 암시적 의사교류는 사회적 자아와 심리적 자아가 서로 다른 두 가지 수준을 가지고 표면적 메시지가 심리적 메시지를 포함하는 형태다. “강의 시작

은 9시입니다(자네 또 지각이네)”, “예 알고 있습니다(한번 봐 주십시오)”같은 형태가 예시일 것이다.

사례로 돌아가 보자. 우리는 모든 소통에서 저마다 다른 입장의 의미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어쩌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넘어 소통을 이룰 수 있을까? 이미 우리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각자의 대화양식이나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일방적인 명령과 금지에 복종하며 자신의 자율성을 유보하거나 포기하는 행동양식을 학습하기도 했다. 무관심 보다는 차라리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때도 있다. 세대 간엔 교차적 의사교류 상황이 발생하기도 있다. 자신만 입이 있고 감정을 함부로 발산해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함에도 그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이기심 대마왕도 있다. 내 마음은 읽히기 싫고 다른 사람의 마음만을 읽기 원하는 독심술사도 있다. 꼭꼭 참는 척 하다가 한 순간 폭발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이도 있다. 이상의 모습들은 교류에서 버려야 할 것들이다. 습관이 된 대화양식이나 행동양식은 노력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 나쁜 정(情)과 교차적 의사교류는 오탁과 상처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소통을 위해 기초적인 2가지 방법을 권유해 본다. 하나는 공감(empathy)으로 상대방을 보고 느낀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함이다. 공감은 타인의 감정 상태에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 강도의 조율이 필요하다. 약기의 개성은 유지하되 조화가 중요한 합주와 같다. 또 하나는 듣기, 경청으로 언어적 메시지뿐 아니라 비언어적 메시지도 관찰해 상대방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듣는 것이다. 경청은 상대방이 충분히 존중받고 있음을 앎과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노출하면서도 부정적인 감정을 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마음과 귀의 문을 열자

공감과 경청은 내면의 문제 해결과 성숙한 인격의 동반을 요구한다. 속 시원한 소통을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마음과 귀의 빗장을 여는 귀인(貴人)이 되어야 한다. 믿을 놈 없다는 세상에 내가 ‘믿을 놈’이 된다면, 상대방의 문을 두드려 어렵게 열리는 마음의 소리를 온전히 들을 수 있다면 이는 멋진 인연이 될 것이다. 관계를 튼튼하며 소통을 잡음 대신 멋진 음악을 들어보자.

